

Education Policy Analysis -- 2004 Edition

Summary in Korean

2004 년도 교육정책 분석

국어 개요

OECD 가 30 여 년 전 처음으로 조사했던 논지인 교육정책을 재검토하며, 제 1 장은 국내 고등교육 제도에서 전통 대학의 대안적 기관이 맡게 된 역할을 새로이 살펴본다. 제 2 장은 ICT 의 교육내 활용을 다룬 다양한 OECD 연구 작업을 포괄적으로 참작하여, 주의해야 할 교훈점을 다소 상기시키며, 교육용 ICT 에 할애된 국내 투자의 수익 제고에 필요한 몇 가지 요건 사항을 제안한다. 제 3 장은 OECD 의 교육 관련 연구 작업에서 여태껏 체계적 분석을 받아 오지 못했던 사항인, 국내 평생교육 틀의 기초를 쌓는 데 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중요 역할에 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 4 장은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활용할 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정책상의 일부 쟁점을 고찰시키며, 이 영역에서 새로운 터전을 제공해 준다. 본 권에 게재된 첨부장은 OECD 의 최근 교육정책 동향을 요약하고 있다.

대학의 대안적 교육기관 재검토

고등교육 제공자 가운데, 대학은 더 이상 독점권을 행사치 않는다. 다수국에서 고등교육 정원 가운데, 1/3 이상이 대학 외 여타 기관에 등록돼 있으며, 이러한 등록생이 대다수인 국가도 몇 있다. 고등교육 공급자로서 비대학기관은 대대적 다양성을 띠어 고교 과정과 단기제 고등교육 과정을 섞은 전문대에서 4년제 학위 수준의 폴리테크닉기관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OECD 지역 내의 비대학기관 확장은 2 개의 공통 절박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첫째로, 고등교육의 총공급을 확장키 위해 여분의 역량 창출이 시급했다. 둘째로, 교육과정 범위와 이의 접근성, 고용주와 더 폭넓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의 차원에 공급의 다양화가 시급했다.

고등교육 제공자로서 비대학기관의 목적은 기관마다 뚜렷이 달라진다. 독일의 Fachhochschulen 을 비롯한 일부 기관은 직업 중심의 학위 제공에 집중을 기울인다.

북미의 지역주민을 위한 대학 따위의 기관은 더 포괄적 수준과 목적의 교육 제공에 주력한다. 기관별 목적은 아래의 3개 핵심 차원에 기인한다:

- **직업교육 지도의 범위.** 다수 국가의 비대학기관은 직업기관이나 기술기관에서 발전돼 왔기 때문에, 일종의 인문학 같은 일반 프로그램 과정 제공이 대학 기관에 비해 떨어진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일부 유형 기관은 대학교 접근성을 제고토록 해야 할 임무를 맡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직업 위주의 교육 지도는 뒷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기관에 북미, 호주의 다목적 기관뿐 아니라, 프랑스의 2년제 일반 자격증이 제공되는 기술대학기관(IUT)이 속한다.
- **제공된 교육 수준.** 영어권 국가의 다수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고교 수준에서 학위 수준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 한편, 독어권과 북구의 다수국의 비대학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학위의 맨 처음 수준에 맞먹는 상급 교육과정만을 주로 제공하여, 더 낮은 수준의 성인 교육은 다른 곳에서 제공돼진다.
- **지역사회 측면에 치중.** 현재 다수국의 비대학기관은 대학보다 많은 조직체를 갖추고 있어서, 지리적 분포가 더 확산돼 있는 실정이다. 이 2개 요소 모두가 지역 주민의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며, 한편 색다른 계기로 인해 지역 사회에 공로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로, 지역 혹 지방 차원의 경제개발을 위한 연구 작업이 실시될 때 이런 계기가 생긴다.

비대학 고등교육 공급자는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교육 공급의 총체적 제도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원 제도나 3부 구분의 제도처럼 특정 상태를 띤 일련의 기관은 조만간 명료히 구분돼지나, 상이한 범주의 기관에서 동일 형태의 교육과정과 자격증이 중복으로 제공되면, 도표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일부국의 비대학기관은 고등교육 총공급의 확장 유도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데, 이는 독일과 핀란드에 특히 두드러진다. 그렇지만, 항상 비대학기관만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비대학기관과 대학의 구분성 여부, 예로 양대 기관 간의 이전 조건, 등이 다수국에서 결정적 사항으로 작용한다.

비대학기관이 교육공급제도 확장에 기여한 역할 가운데, **대부분 국가의 비대학기관에서 학생 1인당 자금 조달이 대체로 낮다는 점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일부국 경우, 이 자금 규모는 대학에 할애된 총지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 초래에 프로그램 차이점이 완전치는 못하나 부분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잇따라 교육 제공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모든 국가는 아니지만 일부국 경우, 비대학기관 학생의 등록비 부담이 덜하다는 사실이 이런 상황 초래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복합적, 이질적 양상을 띤 고등교육제도 내에 형평성 있는 비용·부담구조를 마련토록 보다 신중한 창안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연구중심 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원칙상 중시해야 할 교육 품질이 실제로는 미미한 관심을 받아 왔다는 문제점 또한 드러내고 있다. 비대학 고등교육기관은 투자비만큼의 가치를 되돌리나? 현재 수준의 데이터로는 이를 추산키 어렵다. 그러나 실증 자료 일부에 의하면, 이들의 수익성은 균일치도 못하여, 기관마다, 교육과정마다, 수익 차가 상당히 진다고 밝힌다.

이러한 대학의 대안적 기관이 향후 고등교육 제공에 대거 가담할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제도 내에 이들이 갖는 역할은 정밀화시킬 여지가 여전히 있어,** 이들은 대학과 유사점을 더 지향할지 아니면 대학과 차이점을 강조할지의 전략적 선택에 당면케 된다. 교육정책당국은 비대학기관이 고등교육 제도에서 어떤 역할을 완수할 바라는지, 이 점에 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을 교육과 학습 제고 전략의 필요 불가결한 일부로 보아 온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이는 추가적 교육 보조나 교육비 감축 목적에 한했던 예전의 컴퓨터 용도에 비해, 보다 야심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정녕 ICT 활용 정책은 교육 작업 형태를 변형시키나? 어떤 투자 사업을 실시했고, 잇따라 어떤 유형의 수익이 초래됐으며 한편, ICT의 효과적 전개를 여전히 저지시키는 장애 요소는 무엇인가?

장비 설치 면에 국간 차는 여전히 뚜렷하지만 모든 OECD 국가 교내 ICT에 고강도 투자를 기울여 온 셈이다. 2003년, 한 컴퓨터당 15세 학생 수는 국가에 따라 3-25명 사이이다. 이 차이점은 단순히 국부나 총교육지출비에 반영된 국간 격차로 설명될 수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기술의 물리적 활용 가능성이 보다 널리 보급돼진 현 시점에, 어떤 식으로 ICT를 교육과 학습에 통합하여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점차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ICT가 교육과 학습 변형은 물론, 교내 정보의 운용 제고와 학생의 ICT 능력 갱신을 목적으로 다양히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ICT 투자 수익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 가운데 유독 중요시된 사항에 따라 ICT 투자 유형은 달라지기 때문에, 총수익을 추산키란 어렵다.

일종의 지표 잣대로 학생의 컴퓨터 활용 범위를 살펴본다.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된 덴마크, 헝가리, 영국 경우, 학생 3명 중 2명은 컴퓨터 사용을 매주, 매일, 여러 차례 하지만, 15세 인구의 적어도 3명 중 1명은 교내 컴퓨터 사용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인 국가도 다소 있다. 한 컴퓨터당 학생 수가 유난히 높은 국가가 사용 빈도에서 또한 평균 이상 치를 낸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만한 점이 못 되지만, 장비 투자 규모가 컴퓨터 사용 빈도를 단정케 하는 지표가 못 된다는 사실은 괄목할 만하고도 남는다. 교육 프로를 통한 배움 목적이 아니라 이메일과 인터넷 검색을 위한 컴퓨터 사용이 학생간 가장 일반화된 용도이며, 이 두 가지의 사용 모두로 학생은 교육상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실로, 교육용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듯하다.

ICT는 학습 성과 제고에 기여하나? 기술의 활용 증대로 성과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낸 연구 조사가 몇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불분명하다. 한편, 학업 성취도가 부진한 학생이 ICT로 최고의 잠재적 이득을 보게 된다. 다행히도 이런 학생이 집중된 학교 내의 컴퓨터 설비 수준은 적어도 전체 학교 평균에 맞먹으며, 일부국에서는 앞지르기도 한다. 이는 이익 계층의 학생에게 훨씬 유리한 가정내 컴퓨터 분포 양상에 대조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학교가 디지털 격차의 악영향을 반전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교내 컴퓨터가 부족한 학교에서 성취도가 낮은 학생이 컴퓨터를 대하게 될 경향은 평균에 못 미치어, 교내 접속이 중요해진다.

부진한 학생은 컴퓨터 사용에 또래 학생만큼의 관심은 있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ICT의 효과적 활용으로 학습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자신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사례 연구 조사로 입증된다.

교내 ICT 활용으로 기대된 결과 도출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에 불충분한 정기적 기술지원 및 정비를 비롯한 물리적 재원 충족의 미흡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 장애는 교실 수업, 학교 제도, 교육 제도의 편성 과정에 드러난다. 학교장은

교내 ICT 개발 목표 달성에 4 가지 장애물을 특별히 지적하는데, OECD 총고교생의 적어도 60% 가 각 사항의 악영향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 교실내 수업에 컴퓨터 통합이 어렵다.
- 충분한 컴퓨터 시간 예정이 힘들다.
- 교사는 교육 도구로서의 컴퓨터 활용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 컴퓨터 사용에 관한 수업 준비 시간이 교사에게 부족하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키 위해, 교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컴퓨터의 효과적인 활용법을 습득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학교조직과 교사법 편성에 여전히 변화가 없을 경우, 이와 같은 노력은 충분치 못할 것이다. ICT가 변화를 생성한 주체이든, 변화 초래를 가능케 한 수단이든, 컴퓨터 활용과 학교 발전의 여타 측면 간 밀접한 상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사례 연구 조사의 결론이다. 따라서,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ICT의 잠재성은 ICT를 여타 각종의 혁신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도입시켰을 때에야 비로소 가시화될 것이다.

평생교육에 학교의 기여 정도는?

평생교육은 본래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 연장에 최초로 적용시킨 개념이다. 지금은 **학교교육을 비롯한 평생에 걸친 교육의 포괄적 접근방식**을 뜻한다. OECD 정의에 따르면 평생교육의 기본 틀은 4 개 요소를 포함한다. 각 요소는 학교교육 측면에 다음 사항을 함축한다:

- 편성된 교육은 **조직적이며, 서로 연관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평생에 걸친 각종 시기의 교육으로까지 연결돼야 할 것이다.
- 학습자는 **학습 과정의 중추 역이** 돼야 할 것이다. 이는 강요적 교육에 유난히 도전적인 요건 사항이다.
- 많은 이의 냉담을 사게 된 의무교육은 또다른 도전적 요구 사항으로 **배움의 동기부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경제적, 정책도구적 목적 달성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교육의 다양한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 이내 바람직하다.

학교 제도는 어느 정도로 평생교육의 이상형에 들어맞는지, 3 가지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학생 개개, 조직체로서 학교, 학교 제도.

학생 개개 차원에서, **학교 제도는 학생의 학교 교육 완료 보장은 물론 학생이 성인이 되어 필요케 될 능력을 배양해 가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 완료는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방향으로의 진척 조짐은 격려가 돼 왔다. 대부분 OECD 국에서 청년 대다수가 고교 자격증 이수와 동시에 학교를 중단한다. 그런데, 이 경우, 이들이 습득했을 근로능력과 자질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 PISA 서베이는 이들이 성인 삶에서 필요로 할 핵심 지식과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했다. 결론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예로, 평생교육 연장에 필수 요건인 웬만한 난제성의 읽기 능력에서 부진한 문해력을 보인 학생이 전체의 적어도 3분의 1 인 국가가 다수인 실정이다.

하지만, 단지 **인식적 능력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의 교육 성과 역시 간주치 않으면 안 된다.** OECD가 개발한 능력의 정의와 선정(DeSeCo) 계획은 성인 시기에

필요할 능력의 3개 유형을 확인해 왔다: 언어, 기술 등의 지식 관련 도구의 포괄적 사용; 외부인과의 효과적 상호 접촉; 개개의 자율성 행사. 각 능력을 항상 정밀히 측정치 못하지만, 학교 학생이 평생교육에 대비하여 여러모로 잘 준비돼 있는지의 측정 지표를 PISA가 일부 제공해 왔다. 한편, **자율성에서** 측정 가능한 측면은 학생이 본인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학교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소지가 더 있는 자, 등의 평가이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극소수를 뺀 대부분의 15세 학생이 학교에 ‘소속감’을 느낀다는 결과는 아무쪼록 격려가 된다. 이 실증 결과에서 놀랄 만한 점은 학생들 성적이 월등한 일부국에서 비교적 대다수 학생이 학교 생활에 불행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이 향후 인생 시기로 교육 기회를 미룰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

평생교육 원칙의 두 번째 적용 차원인 **학교 당국은 학생이 학습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 조직체로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 이는 가르침과 변화를 향한 교사들의 의욕적 행동뿐 아니라, 교육 문화를 전면 변화시킬 학교 주도의 혁신을 수반케 한다. 따라서, 다른 데서 혁신의 성공을 촉진했던 그러한 요건에 필적되도록 교육 자체를 유도시켜야 한다. 첫째 요건은 연구 지식의 적용이다. 둘째는 실무전문가와 협력하여 교직 수행의 새방식을 창안하는 것인데 이 때, 교사의 조직망 개선과 교사 간의 협동 작업을 위한 인센티브가 요구된다. 셋째는 ‘모듈 방식’의 혁신 제도를 고안하여, 지역 차이점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지역 혁신을 제도 내의 여타 부분에 합류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혁신의 최종 원동력은 정보통신기술의 효과적 활용에 있다. 물론, 이 모든 측면에 교육 변화를 저지하는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으나, 진척 조짐의 잠재성이 각 요소에 내포돼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평생의 교육 및 훈련의 여타 측면 간에 연관성이 유지될 것을 요구한다. 이 때, **의무교육의 지속적 확장이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인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쟁점은 평생교육에 올바른 기틀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교육을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앞쪽에 신게’ 하려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이 수수께끼 풀이에 유일한 답은 없지만, 각국은 교육기회 제공의 타이밍 설정에 있어 각별한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의무교육수준 이상의 연령별 교육 기회 제공 지원책은 여러 차원의 활동 분야에서 모색돼야 할 것이다.

개개의 평생학습 연장을 유도하는 제도 채비 상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 투자를 경제적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요인과, 이 투자에 할애될 재정 확보를 보장해 주는 요인은 의무교육 외의 적용에 수시로 무력하다. **어쩌면, 이와 같은 경제적, 재정적 인센티브의 강화에 조세정책이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조세정책은 각종 유형 투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용되긴 했으나, 평생교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치밀히 사용된 적은 좀처럼 없었다. 그렇다고, 조세정책이 평생교육에 완전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영향력은 계획적으로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보통이었다.

교육 투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여타 세제 수단과 동시에 조세를 사용하는 이유는, 교육으로 거둔 이익이 사회, 고용주, 개인, 모두에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조받지 못한 민간 부담의 교육비 사례는 저최적 상태인 투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의무교육에 대조되게 성인교육은 국가 차원의 지원 정도가 균일치도 못한 상태이다. 보다 체계적인 비용 지출 분담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최근 OECD 는 현행 공동재정 co-financing 채비에 관한 논의를 통해 조세정책이 다수의 이러한 공동재정 모형에 계획적으로, 혹 여타 방식으로 관련돼 있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 OECD 회의에서 이 맥락으로 확인된 정책 과제의 하나는 재정부와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을 정부 간에 보다 조직화시키는 것이다.

세제 활용은 다양한 목표를 갖는다. 맨 먼저, 경제 활동을 과도로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공공 지출을 위한 돈 걷기; 사회복지 활동의 장려 또한 중요할 수 있다. **평생교육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조세정책은 2 개 주요 경로를 거친다.**

- 첫째, 교육서비스의 판매로 인한 **소득의 과세를 통해**. 요컨대, 교육을 투자로 간주한다면, 교육 소득을 여타 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여 중립성 유지를 보장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또한 모든 교육 공급자에게 동등한 조세 부담을 안길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 위반의 가장 일반적 경위로, 교육 서비스가 영리 조직체 공급일 때는 과세하면서 공공이나 여타 비영리 조직체 공급일 때는 과세치 않을 경우이다.
- 둘째, 교육 투자에 할애된 **비용의 조세적 취급 여부를 통해**. 교육에 든 비용 중 개인과 회사 부담 비용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전반에 걸쳐 조세 지원책의 중용을 이루기는 힘들다. 한편, (비록 일부 사례에서 이미 완화된 사항이지만) 미래 고용보다 현 고용 위주의 교육 장려와, 일터에서의 교육보다 측정 가능성이 더 수월한 교실 활동 촉진, 개인보다 회사측의 비용 부담 강구, 등이 일반 패턴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조세 감면 조치는, 한계 조세율이 대체로 높고 형편이 더 나은 개인과 기업에 더 가치 있게 인식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의 조세 인센티브는 최종 효과에서 상당한 격차를 드러낼 수 있는데,** 이 현상은 중량품 효과가 대폭 야기될 수 있는 일부 경우에 더 두드러진다. 평생교육 대상의 조세정책 수단을 이렇게 다소 임의적이고 일관성 없게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는 신호만이 초래된다. 다수국의 조세당국은 이 문제점의 보다 체계적 접근을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교육부와 재정부는 평생교육 관련 비용과 소득에 관한 조세적 취급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여, 인적자원

투자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어 정책 조정의 필요성 여부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기술한 사항은 3 개국을 토대로 실시한 현 조세정책과 최근 정책 개발의 검토 작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호주**는 교육 공급자의 VAT 면세가 널리 확산돼 있고, 훈련 비용의 일부 범주에서 조세감면조치를 개인과 기업에 다수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청구로 소득세 감면을 혜택받을 수 있는 교육 유형 대상 범위를 최근 확장시켰다. 한편, **핀란드**는 소득 측면의 면세를 일부의 특정 교육 공급자에 한해 허용하며, 비용 측면의 면세 대상에 미래의 개개 소득 능력 육성에 기여하는 활동 사항 전부를 포함시킨다. 그러나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는 힘들다. 한편, 교육당국이 설립한 위원회는 고용주 몫의 교육 비용에 관한 정책을 명료히 하였다. 최근, **네덜란드** 정책당국은 인적자원 투자를 겨누는 정부의 고강도 지원을 향상시킬 취지로 조세정책 활용에 특별히 적극적이었다. 지난 10 여 년동안 정부는 조세 공제 조치를 도입하여, 교육 투자에 관한 고용주의 인센티브를 촉진하고, 특정 목표 집단 대상의 훈련 제도를 지원하면서, 교육 관련 목적의 개인 적금을 장려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2002 년의 재정 압박 이후로, 일부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로 정부는 이와 같은 창의적 방안의 일부를 해체시켜야 했다.

© OECD 2005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